

식민지주의적 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과 일본: 아프리카의 주한유엔군참가와 주한유엔군 후방 사령부

다카바야시 도시유키(高林敏之)
早稲田大学非常勤講師：アフリカ国際関係史
번역 김은애

【들어가며】

본 발표에서는 이른바 「주한유엔군」을 말할 때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던 미국 이외의 참전국,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참전국에 초점을 맞춘다. 그에 따라 유엔군의 주력인 미국만을 보아서는 보기 힘든 한국전쟁이 가진 「식민지주의」적인 측면을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일본사회에서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 「유엔군 후방 사령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일본이 -일본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에서 핵·미사일·납치 등의 위협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 주한유엔군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전쟁체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존재라는 현실을 재확인한다. 그것은 구 식민지국에 대한 구宗主국의 군사적 적대관계에 그치지 않고 오기나와 나 남아프리카와의 식민지주의적인 관계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의 이면성과 주한유엔군】

한반도의 분단은 1990년에 재통일된 독일의 분단과는 달리 「동서냉전」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북문제」를 반영하는 것 - 즉 식민지주의 역사의 잔재 - 이라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¹⁾

이 분단에 기인하는 한국전쟁도 또한 동서냉전과 남북문제라는 두 개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주한유엔군의 구성에도 이것은 반영되어 있다. 주한유엔군이 당시의 유엔을 지배하고 있던 미국의 주도에 의해 편성된 「반공 군대」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참가국(참전국 16개국, 의료파견국 5개국)²⁾의 대부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맹국을 시작으로 서측 군사 동맹국이었다.

그 중에 그리스는 제2차 대전 후의 내전(1946-49년)에서 영미의 군사지원을 받은 반공왕국군이 공산주의 레지스탕스를 소탕한 직후였다. 또한 터키는 개전 전인 1950년 5월 총선거에서 보수파인 민주당이 공화혁명 이래 지배해 온 공화인민당을 제치고 정권을 획득했으며 중립정책을 포기하고 NATO가맹을 염두에 둔 참전이였다. 모두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 NATO가맹을 한다. 필리핀은 1950년대 전반까지 계속된 공산당계 게릴라와 내전 중이였다. 이처럼 냉전하의 반공 군사동맹의 확대와 한국전쟁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동두천시)과 같은 시설에 있는 전시설명에도 명기되어 있다.

한편으로 당시 대부분이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아프리카 대륙에서 참전한 남아프리카연방(1961년에 공화국으로 이행)이나 에티오피아제국(1974년 혁명으로 제정 폐지)의 참전은 「식민지의 민족자결운동역업」의 일환으로서의 한국전쟁이라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필리핀·태국·콜롬비아 등의 참가도 어느 정도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유럽열강에 의한 식민지화를 면하고 오히려 주변민족(오로모, 소마리 등)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대한 「아프리카 내 제국」이었지만 아프리카 지역 총체는 식민지화된 세계였으며, 에티오피아 자체도 1936년-41년에 파시스트 이탈리아에 의해 점령의 괴로움을 맛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에티오피아도 「남」 측에 속하는 나라였다.

이 에티오피아는 1951년 5월부터 「강뉴 대대(Kagnew Battalion)」라고 칭해진 육군부대를 파견하고 총3,518명이 253회의 전투에 참가, 사망자 122명, 부상자 536명을 냈다. 정전 후에도 65년 3월 철수까지 정전감시임무를 맡았다.³⁾ 에티오피아군의 주 전쟁터였던 춘천시에는 에티오피아군의 참전기념비와 참전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그것은 같은 식민지화를 겪은 세계였던 아시아(조선)인과 아프리카(에티오피아)인이 「공산주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인해 서로를 죽이게 되는 비극의 상징이며, 조선식민지 지배의 극복으로서의 통일을 저지하기 위해 식민지 세계의 제국을 동원했다라는 의미에서 한국전쟁의 식민지주의적 성격을 체현한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티오피아제정은 1974년에 그 군대에 의한 「혁명」으로 타도되었다. 혁명 후에 성립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군사독재정권(1974-92년)은 1975년 6월에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18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주한유엔군 사령부 해체 결의(결의 3390(XXX)B)에도 찬성했다. 에티오피아의 국기가 판문점에서 철거된 것은 제정을 쓰러트린 에티오피아에 의한 한국전쟁 부정의 증거이기도 했다.⁴⁾





춘천시의 에티오피아군 참전 기념비와 참전 기념관(다카바야시 촬영)

【주한유엔군과 남아프리카·아파르트헤이트 체제】

남아프리카 연방은 영국연방군의 일원으로서 주한유엔군에 참가, 1950년 10월부터 1953년 10월까지 3년간에 걸쳐 공군 1개 전투비행대대, 총826명을 파병하고 34-37명이 전사했다. 그 임무는 북한에 대한 공중폭격이었으며 남아프리카 공군은 3년간 12,067회 출격, 평양이나 사리원 등의 공중폭격에 참가하고 전차 44대, 교량 152개, 고사포 진지 147곳, 각종 군사시설 10,920곳을 파괴했다고 알려져 있다.⁵⁾ 군사기지도시로서 알려져 있는 평택시에 건립되어 있는 남아프리카군 참전기념비는 공중폭격의 광경을 자랑스럽게 그려내고 있다.

남아프리카는 1910년 영국제국의 자치령(Dominion)에서의 사실상 독립으로부터 1994년까지, 토착화한 백인 입식자들에 의한 소수지배정권이 계속 되어왔다. 1948년에는 네덜란드계 백인(아프리카너를 지칭)의 내셔널리즘을 내세운 국민당이 총선거에 승리하고 정권을 획득, 아프리카인을 시작으로 타 인종을 법제도적으로 완전 격리하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 격리)정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이 남아프리카 백인 입식자 독재체제의 백인 군대가 미군 점령하의 남한단독선거에 의해 수립된 한국의 군사적 동맹자로서 조선인의 머리 위에 폭탄 비를 뿌린 것이다. 한국전쟁의 식민지주의적 성격을 이렇게까지 상징하는 역사적 사실은 없을 것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남아프리카공군의 단체사진(부산·UN기념공원의 기념관에서 다카바야시 촬영: 위쪽) 평택시의 남아프리카군 참전 기념비(아래쪽)와 그 측면에 그려진 공중폭격 장면의 부조(중간)

이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와의 동맹 관계는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비견할 수 있는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이며 아프리카가 북한에게 있어(위신재(威信財)건조나 군사지원의 요

구, 일당 독재시대의 정치적 모델에 그치지 않고)가장 긴밀한 우호관계를 가진 지역으로 있을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이다.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주한유엔군사령부해체결의(결의3390(XXX)B)에 찬성한 54개국 중 실로 30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었다는 사실⁶⁾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에서는 1994년, 전국민 일인 일표제에 의한 총선거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최종적으로 종언하고 아프리카민족회의(ANC)정권이 성립했다. ANC정권은 1998년 8월에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고(한국과는 백인정권 말기인 1992년 12월에 국교수립), 주한유엔군과의 역사적 관계를 끝냈다. 예전의 백인정권시대 남아프리카 국기가 계양되어 있던 판문점에 지금은 그 국기는 없고 전쟁기념관 등에서는 백인군인의 참전을 나타내는 전시와 현재의 민주남아프리카의 국기가 병존하는 모순적인 광경을 볼 수 있다.



판문점 휴전위원회 회의실의 유엔군측 국기(다카바야시 촬영, 위쪽)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남아프리카군관계의 전시(다카바야시 촬영, 아래쪽)

2016년 7월 말, 마이클 뮐러(Michal Muller) 전 남아프리카 공군사령관이 방한하여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사자 추도 행사에 참가한 것이 보도되었다.⁷⁾ 뮐러 퇴역 장군은 한국전쟁 참가를 출세의 발판으로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군사령관(1979-84년)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그가 공군사령관을 지낸 것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불안정 공작」이라고 불린 군사공격이 정점에 달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강경파 보타(P.W. Botha)정권

밑에서 남아프리카 공군은 레소토, 앙골라, 모잠비크, 점령하의 나미비아 등의 군사 공격에 관여했다.

인종주의 체제의 백인공군장교가 한반도에서 아프리카로 살육을 반복하고 나이를 먹은 후 한국에서 훈장을 받는 모습은, 한국전쟁을 통한 한국과 남아프리카의 관계의 부의 역사(負の歴史)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현실의 상징인 것이다.



서울 현충원인 현충탑에 향을 올리는 무려 전 남아프리카 공군 사령관 (『코리아넷』 정한 기자 촬영)

그러나 한국전쟁을 통한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와의 군사동맹관계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아프리카 공군이 주한유엔군에 합류한 것은 그 후방출격거점이 된 일본이었다. 정전 후 1954년 2월에 일본과 주한유엔군 참가국들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유엔군 지위 협정」에는 남아프리카 정부도 조인했으며, 주한유엔군 사령부, 57년 7월 이후는 주한유엔군 후방사령부를 통해 일본과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는 일종의 군사동맹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아프리카 연구자나 평화운동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토론되지 않는 문제이다.

일본과 남아프리카 백인입식자 정권과의 관계는 남아프리카연방이 성립한 19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케이프타운에 명예영사가 임명되고 1918년에는 정식으로 영사관을 케이프타운에 개설, 1937년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주요 전승5대국의 하나가 되고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되자, 그 위신을 배경으로 1930년에 아시아인 이민을 배척하는 「이민법」의 예외로서 일본인을 처우하는 「명예 백인」대우를 인정하게 했다. 백인입식자 지배체제에서 「백인과 동등」한 「식민지제국」으로서 인정받은 것이었다.

일본은 남아프리카와의 사이에 제2차 대전 전에는 「양모 수입·섬유 제품 수출」을, 전후에는 「광물 자원 수입·중공업 제품 수출」을 축으로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1987-88년에는 남아프리카의 입장에서 세계 제1위의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시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비난을 받게 된다. 제1차대전 시기부터 1990년 독립까지 남아프리카의 점령하에 있던 나미비아로부터도 유엔나미비아 이사회의 포고를 무시하고 우라늄의 위법 수입을 계속해 원자력 발전의 개발에 투입했다.⁸⁾

주한유엔군을 통한 일본과 남아프리카 백인 입식자 지배 체제와의 군사 동맹은 양자의 오랜 역사적 관계의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1년의 아파르트헤이트 근간법인 「인구 등록법」의 폐지와 함께 「명예 백인」 대우가 조용히 소멸하고 일본사회에서 잊힌 것과

마찬가지로, 주한유엔군을 통한 양자의 동맹관계도 주목을 받는 일은 없었다. 대북 제재의 이름하에 2016년에 「조선」아파트헤이트적 시책(「조선적」을 북한 국적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분리 집계·공표, 지방 자치제에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문부과학대신의 통지, 「조선적」사람들에게 재입국 권리 박탈의 위협을 포함한 북한에 도항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약서」요구)가 연달아 쏟아져 나왔다는 현상을 본다면 이 역사는 다시금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된다.

【주한유엔군 후방 사령부와 미·일·한 유엔군의 군사적 일체화】

《북조선 위협론》이 높은 목소리로 울부짖어지는 일본 사회에서 자주 무시(또는 망각)되는 것은 한국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더라는 사실이며, 일본이 그 후방기지로서 주한유엔군 체제의 일익을 담당한 북한의 「적국」이라는 현실이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에 주한유엔군측과 북한·중화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오늘날까지 대략 64년의 긴 시간에 걸쳐 「정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에 따라 주한유엔군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임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이것을 후방에서 지탱하고 정전 붕괴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일본에 있는 주한유엔군 후방사령부이다.

그러나 이 사령부의 존재는 일본 사회에서 거의 의식되고 있지 않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김두승은 그 이유를 「기본적으로 유엔군사령부 체제가 유엔안보리 결의에 기반해 창설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해 온 역할에 대한 관심 및 이해 부족에 기인한 면이 크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군이 일본 국내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를 거점으로 자동적으로 관여한다는 구조에 대한 인식부족도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⁹⁾ 앞의 문장은 어찌 됐든 뒷문장이 일본의 평화운동에서조차 충분히 논의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이 1954년 2월에 「유엔군 지위 협정」이 일본 정부와 주한유엔군 참가국들과의 사이에서 체결되고(「유엔군」측의 체약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프랑스, 필리핀, 이탈리아. 나중에 태국과 터기도 가입하여 11개국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57년 7월에 주한유엔군 후방 사령부가 개설되었다. 이 사령부에는 현재 4명이 상주하고 8개국(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태국, 터키)의 주재 무관이 주한유엔군 연락장교로서 도쿄에 있는 각국 대사관에 상주하고 있다.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개설 이래 주일미육군사령부가 있는 캠프자마(キャンプ座間)에 있었으나 2007년에 주일미군사령부·주일미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타(横田)비행장으로 이전했다. 요코타비행장에는 미일 군사일체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2012년 3월에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등이 이전했다. 즉 요코타 비행장을 거점으로 주일미군, 자위대, 주한「유엔군」의 삼위 일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코타 비행장에 사령부를 둔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의 홈페이지의 톱 화면. 유엔기, 성조기, 일장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다.

애초부터 미국은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의 채택이 일본 국내의 주일 미군에 의한 기지사용 문제에 끼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대비해서 일본정부와 협력하여 유사법제의 정비에 착수했다고 지적받고 있으나¹⁰⁾ 현재 상황은 더욱 진행되어 자위대를 미일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주한유엔군에 연결시키는 단계에 달했다. 이 상황은 오키나와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한유엔군은 유엔군지위협정 제5조에 기반하여 7곳의 주일미군 시설·구역(캠프 자마, 요코스카 해군 시설, 사세보 해군 시설, 요코타비행장, 카데나비행장, 후텐마비행장, 화이트비치 지구)의 사용이 가능하고, 「합동 회의」의 합의에 의해 이용가능시설을 변경하고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 합동 회의는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한 사람 및 이 협정의 그 외의 당사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대표자로 조직하고, 각 대표자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의 대리 및 직원단을 가지게 한다」 「합동 회의는 어느 쪽 한 편의 대표자의 요청이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회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직하는 것으로 한다」(제 20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요컨대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전권을 위임받은 고급 관료와 유엔군 후방사령관이 필요에 따라 임의 협의를 하고 주한유엔군의 이용가능시설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로 설계되었다.¹¹⁾

현행 7곳의 유엔군 이용가능시설 중 3곳이 오키나와에 존재한다는 점, 그 중에 현재 헤노코 「이설」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와의 대립의 초점이 되어 있는 후텐마비행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주일미군의 재편 문제와 주한유엔군과의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이며, 헤노코 신기지 문제는 주한유엔군과 불가분의 문제인 것이다.

집단적자위권과 유엔의 안전보장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제도화하고 지리적 제한이 없는 해외군사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 법제」가 성립한 지금, 한반도의 구식민지종주국인 일본과 주한유엔군과의 군사적 일체화의 진행이, 구 식민지인 북한과의 긴장을 높이는 일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 측에 한층 더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의 일환으로서 「류큐 처분」에 의한 강제 병합 역사를 가진 류큐/오키나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역압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한국전쟁의 식민지주의적 성격을 더욱 보강하는 것이 된다.

【결론을 대신하여】

일본과 북한과의 사이에 국교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나, 일본이 처음부터 북한을 국가로서 승인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다. 외무성의 홈페이지에는 《북조선》은 국가가 아니라 타이완이나 팔레스티나와 같은 지역으로서 분류되어 있고, 정식 국명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다. 유럽연합(EU)가맹국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약 160개국 및 EU와 외교관계를 가지고, 1991년 이래 유엔가맹국이기도 한 북한을 승인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현 상황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남태평양의 작은 도서국인 쿡제도(Cook Islands)를 2011년에, 니우에(Niue)를 2015년에 국가로서 승인하고 국교도 수립했다. 태평양의 도서지역을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양국은 뉴질랜드의 자유연합국으로 외교와 방위의 최종적 책임을 뉴질랜드에 맡기고 유엔에도 가맹하고 있지 않다(다만 외교에서는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유엔산하의 전문 기관이나 태평양 도서 포럼에는 가맹). 게다가 양 국민은 전원이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쿡제도 국민의 약 85%, 니우에 국민의 약 95%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의 주권국가성은 널리 의문스럽게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로 쿡제도와 국교를 맺은 나라는 44개국, 니우에와 국교를 맺은 나라는 20개국에 그치고 있다.

이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일본이 북한을 국가 승인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의 이상함이 더욱 눈에 띈다. 북한의 구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추세에 반해 형식적인 국가승인조차 북한에 하지 않고,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주한유엔군의 후방사령부를 두고 미군 재편에 연동해서 일본과 주한유엔군과의 군사적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위에 「조선적」이나 「조선학교」를 역사적 배경과 상관없이 북한과 등호로 엮어 「적성국민」 카테고리로서 위치지우는 아파트헤이트 정책조차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객관적으로 봐도 북한의 「적」으로서 역사적으로 행동해 왔다. 그러나 일본인은 그 자각이 부족한 채로 《북조선 위협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한유엔군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식민지주의의 역사를 청산 못한 현 상황과 표리일체인 것이다.

-
- 1) 고연의 (高演義), 『〈민족〉이라는 것-제3세계로서의 재일조선인(『〈民族〉であること-第三世界としての在日朝鮮人』) 사회평론사, 1998년, 90-91쪽
 - 2) 참전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터키, 그리스,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의료반파견국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이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10개국이 개전 당시부터 NATO 가맹국으로 터키와 그리스는 전쟁 중인 1952년에

- NATO에 가맹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전쟁 중인 1951년에 미국과 ANZUS조약을 체결. 필리핀과 태국은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1954-77년)의 가맹국이 되었다.
- 3) 에티오피아군 한국전참전기념관, 전쟁기념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등의 전시 해설에 의함.
 - 4) 1991년에 이 멩기수트 독재정권을 타도한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정권은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채용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와 춘천시는 2004년 5월에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 2006년 2월에는 아디스바바에 2007년 3월에는 춘천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 5) 남아프리카참전기념비의 유래 설명문이나 전쟁기념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설명에 의함.
 - 6) 결의 3390(XXX)B에 찬성한 아프리카 나라는 다음 30개국:알제리아, 보츠와나, 부룬디, 카보=베르데, 차드, 코모로, 콩고, 다오메(현 베냉),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토고, 우간다, 카메룬, 탄자니아, 잠비아. 또한 아프리카 나라 중 반대는 중앙아프리카, 가봉, 코트=디부와르,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스와질랜드의 7개국으로 모두 당시의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친서측, 반공정권이였다. 기권은 케냐, 모리셔스, 모로코, 니제르, 시에라=리온, 튀지아, 자일(현 콩고 민주공화국)의 7개국. 결석은 감비아, 오토=볼터(현 부르키나=파소)의 2개국. 이 결의는 이른바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반하는 한반도의 독립과 평화적인 재통일을 장려하고 한반도에 존재하는 현행의 정전상태가 유지되는 한 영속적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한국에 주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등 북측의 주장에 매우 가까운 내용이었다. 이것보다 먼저 비동맹운동 외상회의에서 북한이 비동맹운동의 가맹을 정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 7) 정한(이진현 번역) 「한국을 방문한 한국전쟁 참전자」『코리아넷』 2016년 7월 26일.
<http://m.korea.net/japanese/NewsFocus/Society/view?articleId=138882&page=1>
 - 8) 남아프리카 입식자 지배체제와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모리카와 준(森川純)의 『남아프리카와 일본-관계의 역사·구조·과제(南アフリカと日本-関係の歴史・構造・課題)』(동문관, 1988년) 등 일련의 저작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 9) 김두승(金斗昇) 「유엔군 사령부 체제와 한미일 관계-이른바 한반도 유사에 초점을 맞춰(「国連軍司令部体制と日米韓関係 - いわゆる朝鮮半島有事に焦点を合わせて)」, 『릿료법학』제86호, 2012년, 288쪽.
 - 10) 김두승 앞의 논문, 289쪽.
 - 11) 주한유엔군 지위 협정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na/fa/page23_001541.html 및 일본국에서의 국제연합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문(데이터 베이스 세계와 일본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다나카 아키히코 연구실)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JPUS/19540219.T1J.html> 를 참조하기 바란다.